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안이유

2025년 2월 25일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되어 한 달이 지났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탄핵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여야 할 다섯 가지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①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의 상황이 아님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하였고, ②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였으며, ③ 비상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권한이 있는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침탈하여,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강압에 의하여 봉쇄하려 시도하였고, ④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헌·위법적 포고령을 발표하였으며, 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게 하고, 사법부의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음에도, 헌법재판소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지금까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으로 국내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신인도는 추락하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다시 하향 조정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2025년 3월 25일 기준 1,470원으로 급등하였다. 또한, 폐업한 자영업자는 2025년 1월 및 2월 두 달 동안 20만 명에 이르렀고, 청년 실업자는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심히 추락시켰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는 대한민국을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중인 국가’로 분석하면서, 대한

민국의 민주주의 단계를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시켰다. 또한, 영국 경제조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이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32위를 기록하여 2023년 평가보다 10단계나 급락했다.

무엇보다도, 12·3 비상계엄은 국민들의 일상을 빼앗았다. 비상계엄 발생 후 4개월여 동안 국민들은 광장과 거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는 헌법재판소 역시 이를 모를 리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후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이루어졌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들보다 지체될 이유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가 있었다. 이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다. 유흥식 추기경은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입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

한, 최근 한강 작가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라고 밝힌 바도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뿐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